



헝가리, 유럽 재정위기 재점화

정인영 연구원

요약

■ 최근 헝가리 경제상황이 악화되며 유럽은 물론 세계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헝가리는 지난해 11월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IMF와 EU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으나 12월 헝가리 의회가 통과시킨 「중앙은행법」 개정(안)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IMF와 EU는 공식 협상을 미룬 채 시정을 요구하였음. 이에 따른 헝가리의 디폴트 우려로 인해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위기가 증폭되는 모습을 보였음. 이후 헝가리는 신속한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중앙은행법」 개정(안) 논의를 비롯해 조건 없는 협상 의사를 밝혔고, 이에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으나 IMF와 EU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금융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동시에 EU 재정적자 기준 위반에 대해 강경한 제재를 취할 것을 경고하였음. 헝가리는 비유로존 국가이고 경제규모도 크지 않으나 헝가리 국채의 대부분을 유로존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위험이 전역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향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헝가리는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지난해 11월 IMF와 EU에 약 150억~2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신청함.

● 2008년 말 251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은 바 있는 헝가리는 현재 공공부채가 1995년 이래 최고 수준인 720억 유로로 GDP의 82.6%에 이름.

■ 그러나 IMF와 EU는 지난해 12월 헝가리 의회가 통과시킨 「중앙은행법」 개정(안)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공식 협상을 중단하였고, 시장은 헝가리의 부실 재정과 디폴트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위기가 증폭되는 모습을 보임.

● 헝가리는 IMF와 EU가 수정을 권고한 「중앙은행법」 개정(안) 중 총리가 임명하는 중앙은행 부총재 수 확대(2명 → 3명) 등 논란의 핵심을 고수한 채 통과시키자 공식 협상이 중단됨.

- 1월 5일(이하 현지시각) 헝가리가 1년 만기 국채 입찰에 나섰지만 목표치인 450억 포린트에 못 미치는 350억 포린트를 발행하는데 그쳤고, 낙찰금리도 9.96%로 지난 2009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국채발행에 실패하자 유로당 포린트화 환율은 321.92, CDS 프리미엄은 754bp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 1월 6일 Fitch는 헝가리의 성장 및 재정 전망이 어둡고 외부로부터 자금 차입요건이 악화되었다며 헝가리 신용등급을 BBB-에서 투자부적격 등급인 BB+로 한 단계 강등하고 신용등급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함.
- 앞서 S&P와 Moody’s도 각각 투자부적격 등급인 ‘BB+’, ‘Ba1’으로 헝가리 신용등급을 강등함.

〈그림 1〉 헝가리 환율과 CDS 프리미엄 추이

〈유로당 포린트화 환율〉

〈CDS 프리미엄〉

(단위: 포린트)

(단위: bp)



자료: bloomberg.

■ 이에 위기를 느낀 헝가리는 신속한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IMF와 EU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은행법」 개정(안) 재논의를 비롯해 조건 없는 협상 의사를 밝힘.

- 헝가리는 당초 예방대출(PCL)에 따른 자금지원을 요청했으나 상황이 악화되자 재정긴축 이행 등 좀 더 까다로운 자구 노력이 요구되는 대기성차관(SBL) 형태도 불문하겠다는 그간의 여유로운 태도를 접음.
- 이후 시장은 다소 안도감을 되찾았고, 헝가리는 1월 9일에서 12일 사이에 6주 만기 국채 400억 포린트, 3개월 만기 국채 450억 포린트, 2년, 5년, 10년 만기 국채 440억 포린트를 발행하는데 성공함.

■ 그러나 EU집행위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금융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고, IMF 역시 협상 개시 여부와 시기 결정 이전에 헝가리 정부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IMF는 유럽 정부 및 금융기관들의 지원이 이번 헝가리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힘.

■ 한편 EU집행위는 1월 11일 성명을 통해서 헝가리의 EU재정적자기준 위반에 대해 강경한 제재를 취할 것을 경고하며 실효성 있는 헝가리의 자구 노력을 촉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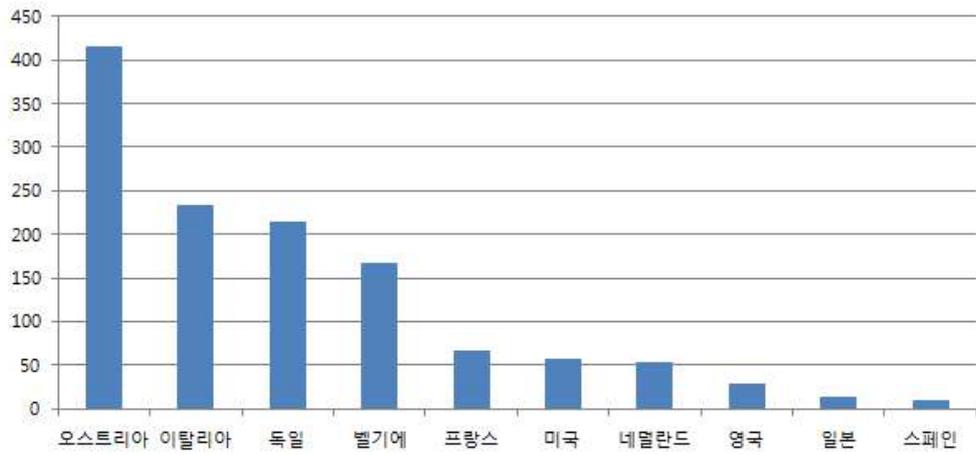
- EU집행위는 헝가리가 지난 2004년 EU 가입 후 사실상 EU재정적자기준을 계속 어기고 두 차례의 시정 경고도 무시했으며, 실질적인 재정적자 감축 노력 없이 일시적인 조치만을 취했다고 경고하며 EU법규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EU경제·재무장관회의에 촉구함.
- 헝가리는 EU협약 기준에 따라 연간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해야 함.
- 그러나 지난 해 헝가리 재정적자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일회성 조치들을 빼면 재정적자가 GDP 대비 6%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밝힘.

■ 헝가리는 비유로존 국가이고 경제규모도 크지 않으나 헝가리 국채의 대부분을 유로존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위험이 전역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행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헝가리 국채 중 약 85.7%를 유로존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2011년 6월 기준 오스트리아가 416억 유로, 이탈리아가 234억 유로, 독일이 214억 유로, 벨기에가 168억 유로 순으로 보유하고 있음.
- 헝가리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경우 1월 5일 헝가리 구제금융 협상이 중단되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전날대비 11bp 상승한 3.64%를 기록하는 등 헝가리 경제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임.
-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이탈리아나 벨기에의 경우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헝가리 은행들의 경우 유로존 은행들이 소유하고 있는 비중이 커서 유로존 은행권의 신용경색이 현실화될 경우 헝가리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됨. **kiri**

〈그림 2〉 헝가리 국채에 대한 해외은행의 익스포저

(단위: 억 유로)



자료: BIS, 2011년 6월 말 기준; Reuters 재인용.